

국가·국제기구 농업 브리프

1

미국



지원 통해 지역 먹거리 시장 확대 및 농가 판로 연계 강화 보조금 지원

미국 농무부(2026.3.10.)

- 2026년 3월 10일 미국 농무부(USDA)는 지역 농산물 유통 및 지역 식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Local Agriculture Market Program(LAMP)을 통해 총 2,680만 달러(약 38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지원은 농업인의 지역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먹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와 지역 식품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지역 먹거리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미국 농무부는 'Farmers First' 정책 기조 아래 지역 및 권역 단위의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의 산지 소비 촉진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FMPP)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촌관광, 온라인 판매 등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를 지원하며, Local Food Promotion Program(LFPP)은 수집, 가공, 유통, 저장시설 건설, 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지역 식품 공급망 구축을 지원함. 마지막으로 Regional Food System Partnership(RFSP)은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함.



미국산(Product of USA) 표시 장려 정책 실시

미국 농무부(2026.3.24.)

- 2026년 3월 24일 미국 농무부(USDA)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Product of USA' 표시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함.
 - 이번 정책은 2024년 개정된 미국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¹⁾에 근거해 생산자와 식품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Product of USA' 표시 장려 정책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미국 농가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공급망 추적 역량 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원산지 기준의 강화로 미국산 육류, 가금류, 계란 등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며, 수입 원료를 활용한 제품과 미국산 원료의 구분이 용이해져 미국 농가의 경쟁 여건 개선에 기여함.
 - 또한 강화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 사육, 가공 단계별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은 미국산 표시 활용을 위해 수입산 대신 국내산 원료 조달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음.



과수 및 채소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 추진

미국 농무부(2026.4.13.)

- 2026년 4월 13일 미국 농무부(USDA)는 'Working Families Tax Cuts' 정책의 일환으로 특용작물(Specialty Crops) 산업에 대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조치는 과일, 채소, 견과류 등 특용작물 생산자의 경영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생산, 유통, 연구개발, 병해충 대응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1) 과거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가축이 미국에서 단순 가공만 거쳐도 "Product of USA" 표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개정된 원산지 표시 규정에서는 실제 미국 내 생산 과정을 거친 제품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 예를 들어 가축의 경우 미국 내에서 출생(부화), 사육, 도축, 가공된 제품에 대해서만이 표시를 사용할 수 있어 가공 단계에만 적용했던 기존 규정과는 차별화되는 엄격한 기준임.

- 특용작물 산업을 육성하는 본 조치는 미국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또한 미국산 과일 및 채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공급망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AI 기반 수입검사 체계 강화로 미국 FDA 통관거부 사례 급증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4.30.)

-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가 2025년 전년 대비 60.8% 증가한 3만 2,732건을 기록함.
 - 이는 보호무역 강화보다는 AI 기반 검사시스템 도입, 해외 제조시설 불시점검 확대, 수입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규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FDA는 생성형 AI 'Elsa'를 활용해 제품 라벨과 신고 정보의 미세한 차이까지 자동 검출하고 있으며, 기존에 통과되던 경미한 표시 오류도 적발 대상이 되고 있음. 또한 해외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불시에 점검하고 있어 점검 거부 시 통관거부나 수입경고 조치를 부과하기도 함. 즉, 전반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FDA는 수입 심사 현대화 프로그램(FDA Import Shield Program, FISP)을 도입하여 전국 항구의 수입심사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SERIO+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데이터와 검토 시스템을 추가로 통합할 계획임. 따라서 수입신고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식품지원프로그램 참여 소매점의 신선식품 취급 의무 강화

미국 농무부(2026.5.7.)

- 미국 농무부(USDA)는 저소득층 식품지원프로그램인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참여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진짜 식품(Real Food) 취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함.
 - 해당 규정으로 인해 SNAP 가맹 소매점은 단백질, 곡물, 유제품, 과일·채소 등 4개의

식품군에서 각각 최소 7종 이상의 식품을 상시 구비해야 하며 신선식품의 비중도 확대해야 함. 일부 스낵류가 기본 식품으로 인정되던 예외 규정은 폐지됨.

- 본 정책은 신선농산물 수요 확대와 농산물 유통채널 확대, 지역 먹거리 공급망 강화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신선농산물 저장 및 재고 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규모 소매점의 운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유럽

**식품공급망 내 농업인 지위 강화에 관한 정치적 합의 달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3.6.)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업인의 식품공급망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EU 농산물 시장의 공동조직 개설 규정(CMO, Common Organization of Agricultural Markets)²⁾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함. 본 개정안은 농가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급망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농업부문 종사자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농산물 생산비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대형 유통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한 농가의 협상력 약화 등으로 인해 2024년 유럽 전역에서 농민시위가 발생하자 농가 소득 안정과 공급망 내 공정성 확보가 EU 농정의 핵심과제로 부상하였음.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업인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해 옴.
- 본 개정안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농식품 공급망 전반에 적용됨. 구체적으로 생산자 조직 강화, 계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거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생산자 조직 강화로 농가의 시장 교섭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면계약 확대와 거래조건 명시 등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약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U-호주 FTA 협상 타결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로 농업부문 협력 확대 전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3.24.)

- 2026년 3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호주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2) 농산물 시장의 공동조직 개설 및 이사회 규정 (EEC) 제922/72호, (EEC) 제234/79호, (EC) 제1037/2001호 및 (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제1308/2013호(2026. 03. 18.자 개정 반영본) (<https://eur-lex.europa.eu/eli/reg/2013/1308/2026-03-18>), 검색일: 2026. 6. 23.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고 안보·국방 파트너십(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도 출범했다고 발표함. EU-호주 FTA는 2018년 개시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로 장기간 교착되었으나 이번 협상³⁾에서 최종적으로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함.

- EU는 역내 농업 보호를 위하여 소고기, 양고기, 유제품, 설탕, 쌀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호주로부터의 수입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음. 이들 품목에 대해 저울관세할당(TRQ) 방식의 시장개방에 최종합의함으로써 호주의 EU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
- 또한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으로 EU 시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함.
- EU-호주 FTA 합의문에는 농식품 교역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성,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CRMs) 공급망 강화, 지리적 표시(GI) 보호, 와인 협정 현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 또한 핵심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무역지속가능발전(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SD) 관련 의무도 포함하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 및 위험관리 수단 고도화 필요성 대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3.25.)

- 세계은행이 수행한 EU 농업위험관리(Agricultural Risk Management, ARM) 체계 분석 연구 결과가 공개됨. 보고서는 기후변화, 시장 변동성, 질병 발생 등 농업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EU의 현행 위험관리 체계를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설계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사후 보상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력(resilience)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함.
- 현재 EU는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농업보험 지원, 상호기금, 소득안정화제도, 재난

3) 양측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 확대, 투자 촉진, 디지털 무역, 지속가능성, 정부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에 합의함.

지원프로그램,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방적 위험관리 기능(위험 예방, 적응 투자, 농가 차원의 회복력 강화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함. 또한 기후변화대응 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확대를 강조하였으며,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통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한 2028~2034년 CAP 개혁 방향 제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4.28.)

- 2026년 4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차기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수립을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CAP 2028~2034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환경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의 균형', 농업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과 중심의 정책 확대', 행정절차 단순화를 통한 '농업인의 행정부담 완화', 비용 절감 및 환경성과 개선을 위한 '디지털 및 혁신 기술 활용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함.
 - 이외에도 '청년농 및 세대교체 지원', '위험관리 및 회복력 강화'가 정책 목표로 포함됨.

※ 이는 EU 내 다양한 농업부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이에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경우, 국내 농정 수단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AI 기반 식품 안전 통합 플랫폼 'TraceMap' 도입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5.15.)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식품사기, 식품오염 및 식중독 발생을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해 AI 기반 식품 안전 통합 플랫폼 'TraceMap'을 공개함.
- TraceMap은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 무역통제전문가시스템(TRACES), 경보협력네트워크(ACN) 등 다양한 식품안전 데이터를 AI로 통합 분석하여 제품, 사업자, 선적물 간 연관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시범 운영 과정에서 중국산 아라키돈산(ARA) 오일 오염 사건에 대해 원료 공급업체부터 최종 판매처까지의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추적함으로써 오염 제품 회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활용됨.



비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비료 행동계획'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5.19.)

- 2026년 5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업 생산의 핵심 투입재인 비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료 행동계획(Fertilizer Action Plan)'을 발표함.
 - 이 계획은 최근 비료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농가 지원, 비료 생산기반 강화, 수입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바이오 기반, 저탄소, 순환형 비료 전환을 통한 장기적인 식량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중점으로 두고 있음.
- 우선 공동농업정책(CAP)을 활용하여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함. 또한 비료 산업의 탈산업화를 방지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생산기반 확대를 지원함.
 - 장기적으로는 기존 광물비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순환형, 바이오 기반 비료 확대'⁴⁾를 추진하고 비료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영양분 관리 및 정밀 농업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역 내 비료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4) 특히, 유기질 비료, 바이오기반 비료, 소화액, 미생물기반 비료, 바이오자극제 등의 대체 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임.

3

아시아

**(일본) 농업분야 AI 활용 가속화를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일본 농림수산성(2026.3.6.)

-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적절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연구개발·기술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예정임.
 - AI 기술은 높은 활용도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데이터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따라서 농업 현장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할 예정임.
- 가이드라인은 생산단계(병해충 진단, 생육 예측, 수확량 예측, 정밀농업 활용), 연구개발 단계(연구자료 분석, 문헌 검색, 품목 및 육종 연구), 행정 및 정책 분야(정책자료 작성, 통계 분석, 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임.

**(일본) 가공식품 탄소발자국(CFP) 산정 가이드 개정**

일본 농림수산성(2026.3.18.)

- 2026년 3월 18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가공식품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CFP) 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공통 CFP 산정 가이드를 개정했다고 발표함.
 - 식품기업 2개사가 참여한 2025년도 CFP 산정 모델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실무중심으로 가이드를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공급망 탈탄소화를 촉진할 계획임.
- 가이드 개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CFP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 식품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 CFP는 제품의 원료 조달, 생산, 가공,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제품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산정 시에는 전기·연료·비료 등의 사용량에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사용량 × 배출계수⁵⁾)을 적용하며, 가능한 경우 실제 생산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우선 활용함.



(태국) 가열 조리용 식품 접착 종이제품 인증기준 강화 추진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4.24.)

-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가열 조리용 식품 접착 종이제품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한 검사기준 개정 초안을 발표함.
 - 2027년 6월부터 해당 제품이 강제표준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태국 내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개정안은 제품 시험 방법, 공장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표준마크 부착 의무, 사후관리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제조공장은 ISO 9001, ISO 22000, FSSC 22000, BRCGS PM 등 국제 인증을 통해 품질관리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인증 제품은 최소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취득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준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강제표준 시행 이후 인증 및 표준마크가 없는 제품은 통관 거부, 압류 또는 폐기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만) 식품업자에 대한 제품책임보험 정보 등록 의무화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5.11.)

- 대만 위생복지부는 '식품업자 등록규정'을 개정하여 제조·가공업, 요식업, 수입업 식품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정보 등록을 의무화함.
 - 이번 조치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 배출계수는 전력의 경우 1.4~0.5kgCO₂e/kWh, 경유는 2.6kgCO₂e/kWh, 휘발유는 2.3kgCO₂e/kWh 등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며, 비의 메탄 발생이나 축종별 장내발효와 같이 작물과 축종 특성을 반영한 품목별 배출계수도 추가로 활용될 수 있음.

- 적용 대상 업체는 식품업자 등록 시 보험회사명, 보험증권번호, 보험기간, 보장금액 등 제품책임보험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보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갱신해야 함.
 - 판매업과 물류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대만 정부는 등록된 보험 정보를 통해 식품업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할 계획임.



(중국)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 대상 식품안전 책임관리 규정 시행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5.11.)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식품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식품안전 책임이행 감독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
 - 규정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며,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는 식품 생산·영업 허가 취득, 제품정보 공시, 식품안전 책임자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또한 제품 표시 정보와 실제 제품 간 일치 여부를 유지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판매자 자격 심사,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위반행위 모니터링 등의 책임을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벌금(최대 20만 위안),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인도네시아) 사료용 밀, 대두박, 녹두, 땅콩 등 4개 품목 수입 제한 품목 지정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5.22.)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농가 보호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및 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을 개정하고 사료용 밀, 대두박, 녹두, 땅콩 등 4개 품목을 신규 수입제한 품목으로 지정함.

- 해당 품목 수입 시 농업부 기술추천서(Pertek)와 무역부 수입승인(PI)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일부 기존 제한 품목에는 추가 수입요건이 부과됨.
- 신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수입 시 수입업자 등록번호(API) 보유를 전제로 농업부 기술추천서와 무역부 수입승인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또한 기존 수입제한 품목인 사료용 쌀과 배에 대해서는 상품수지(Neraca Komoditas) 반영, 냉장창고 증빙,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추가 요건이 부과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자급 정책에 따라 향후 설탕, 소금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시함.



(일본) 우유·소고기 대상 환경부담 저감 표시제 시범사업 실시

일본 농림수산성(2026.5.22.)

- 2026년 5월 22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우유와 소고기를 대상으로 ‘환경부담 저감 표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번 사업은 생산 과정의 사육두수, 사료 관리, 분뇨 처리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 등급 형태의 ‘라벨’로 표시하는 방식임.
- 농림수산성은 판매 실증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한편, 향후 참여 사업자와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축산물 분야 환경정보 표시제도의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는 생산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비자 선택과 연계함으로써 저탄소 축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환경성과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생산 과정의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여 향후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정책 및 환경성 표시제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국제기구⁶⁾

이번 호에서는 제38차 아태지역총회 회의록을 토대로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농정 의제와 회원국의 대응 동향을 주요 의제별로 요약 및 정리하였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공급망 회복력과 개방 무역 강조

-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과 식품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체제 유지의 중요성이 부각됨. 이에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차질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식량안보를 생산 확대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무역 연계성, 농업투입재 확보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
- FAO는 중동지역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물류가 교란되면서 에너지 및 비료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 생산비 상승과 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이에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식량 및 비료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지양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역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회원국들은 FAO 식량가격지수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⁷⁾이 시장 투명성 제고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함.

6) 본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8차 아태지역총회 회의록 제공 및 내용 검토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

7) AMIS(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재고·교역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 식량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G20이 설립한 정보공유 플랫폼임.



농업혁신의 핵심 의제로 AI·디지털 전환 부상

- 회원국들은 생산성 향상, 기후위기 대응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AI,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식품시스템 혁신을 강조함.
 - 회원국들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농업인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와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즉, 디지털 전환은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의사결정 고도화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됨.
- 일부 회원국들은 AI,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한 농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 전략을 소개함.
 - 중국은 AI 기반 스마트 육종, 농업용 로봇 개발 등을 통해 2025년 곡물 생산량이 사상 최대 수준에 도달한 사례를 소개함.
 - 인도는 농업인 디지털 신원체계(Agri Stack)와 AI 영농자문 서비스(Bharat-VISTAAR)를 통해 농업인의 정보 접근성과 정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함.
 -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국가 농업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이력추적 플랫폼 확대 및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함.



ASF·HPAI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논의

- 회원국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초국경동물질병이 식량안보와 국제 농축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국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FAO는 질병 예방, 정보공유,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새로운 국제 협력체계인 GPP-TADs(Global Partnership Programme for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⁸⁾ 출범 계획을 제시하였음.

8) GPP-TADs는 초국경동물질병 예방·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회원국 간 질병 정보 공유, 조기경보 체계 구축, 실험실 및 방역 역량 강화, 기술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함. FAO는 기존 사업 단위 협력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ASF, HPAI 등 주요 동물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본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은 초국경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GPP-TADs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다수는 초국경동물질병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GPP-TADs가 기존 국제협력 체계(GF-TADs 및 WOAH 등)와 중복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질병관리 체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GPP-TADs의 거버넌스, 재원조달, 운영방식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일부 회원국들은 기존 국제 동물질병 협력체계인 GF-TADs 및 WOAH와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중복 사업을 방지해야함을 강조함.
 - 태평양 도서국⁹⁾들은 제한된 방역 인프라를 고려하여 질병 예찰, 조기경보, 실험실 진단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기술·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함.



농식품 투자 확대 플랫폼으로 FAO Hand-in-Hand 이니셔티브 주목

-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복합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투자와 기후금융을 연계한 농식품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FAO Hand-in-Hand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국가별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정부·국제기구·민간투자자를 연계하여 농식품 분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플랫폼임.
 - 회원국들은 투자 파이프라인 구축과 민관협력 확대가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함.
- 회원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해 투자 플랫폼과 민관 협력 모델 활용 사례를 소개하여 Hand-in-Hand 시행 현황을 공유함.

9) 태평양 도서국은 호주와 뉴질랜드 북쪽 및 동쪽의 태평양지역에 흩어져 있는 14개의 섬나라(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이 크로네시아, 나우루, 투발루, 바누아투, 키리바시, 팔라우, 마셜제도, 사모아, 통가, 쿡제도, 니우에)를 의미함.

- 방글라데시는 농업기계화 및 가치사슬 개발을 통해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함.
- 필리핀은 아바카¹⁰⁾, 망고, 해조류 등 품목 중심 투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민간 파트너십 확대 사례를 소개함.
- 혼합금융(blended finance)과 기후금융을 활용하여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함.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바이오경제 논의 확대

- 회원국들은 농업·임업·수산업 등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순환경제 구현을 통해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바이오경제(Bioeconomy)의 중요성을 강조함.
 - FAO는 바이오경제를 농식품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선정하고, 회원국 간 정책 공유와 협력 확대를 위한 자발적 국제협력 플랫폼(Bioeconomy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Partnership)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일부 회원국들은 바이오경제 및 순환경제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함.
 - 일본은 'MIDORI 전략¹¹⁾'을 통해 화학비료·농약 사용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인도는 바이오비료, 바이오농약, 바이오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농업의 저탄소 전환과 투입재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브루나이는 농업 부산물 재활용,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등을 통한 순환경제 사례를 공유하며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 구축 노력을 소개함.

10) 아바카(Abaca, *Musa textilis*)는 바나나과에 속하는 다년생 섬유작물로, 마닐라삼(Manila hemp)이라고도 불리며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천연섬유 생산에 활용됨.

11) 'MIDORI 전략'은 일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녹색 식품시스템 전략(Green Food System Strategy)」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을 위해 환경부하 저감, 자원순환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임.

■ 참고문헌

-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2026.3.10.), “USDA Announces New Funding to Connect Farmers to Local Markets”.
- _____ (2026.3.24.), “USDA Promotes New, Voluntary “Product of USA” Label”.
- _____ (2026.4.13.), “USDA Announces Specialty Crop Investment Thanks to Working Families Tax Cuts”.
- _____ (2026.5.7.), “USDA Requires SNAP Authorized Retailers to Carry More Real Food”.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26.3.6.),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of the position of farmers in the food supply chain”.
- _____ (2026.3.24.), “EU and Australia strengthen relations with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and Trade Agreement”.
- _____ (2026.3.25.), “World Bank study provide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to enhancing agricultural risk management in the EU”.
- _____ (2026.4.28.), “Driving sustainable farming: new guidance for CAP 2028–2034”.
- _____ (2026.5.19.), “Commission presents plan to secure Europe’s fertiliser supply and food security”.
- 일본 농림수산성(MAFF)(2026.3.6.),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 공급 실시 계획 인정(「農業の生産性の向上のためのスマート農業技術の活用促進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開発供給実施計画を認定しました)”.
- _____ (2026.3.18.), “가공식품의 탄소발자국(CFP)산정 가이드를 실천적인 관점에서 개정 (2017년 CFP 산정 모델 사업)(加工食品におけるカーボンフットプリント(CFP)算定ガイドを実践的な観点で改定(令和7年度CFP算定モデル事業))”.
- _____ (2026.5.22.), “축산물의 환경 부담 저감의 대처 「라벨」 판매 실증 확대!(畜産物の環境負荷低減の取組の「見える化」販売実証を拡大!)”.
-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4.24.), “[태국] 식품 접촉 종이 제품 검사기준 초안 발표”.
- _____ (2026.4.30.), “[미국] FDA 통관거부 증가 추세와 주요 원인”.
- _____ (2026.5.11.), “[대만] 식품업자에 제품책임보험 정보등록 의무 부과”.
- _____ (2026.5.11.), “[중국]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 식품안전 책임이행 규정 제정”.
- _____ (2026.5.15.), “[EU] 집행위원회, AI 식품안전 플랫폼 ‘TraceMap’ 발표”.
- _____ (2026.5.22.), “[인도네시아] 농축산물 수입 정책·규정에 관한 장관령 개정”.

